

국감초점

교육위

“돈반아서 학원장 고발 못했나”

강동교육청 사건 집중추궁...“3만여곳 단속 불가능” 토로

대학입시 부정, 후기대 입시문제 유출, 내신조작 등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교육계 ‘비리 행진’이 올 국정감사에서는 입시학원 부조리로 이어졌다.

7일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강동교육청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유착 공무원 색출 주장과 함께 대안도 거론했으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찌든 ‘입시교육’ 속에 깊이 뿌리박힌 교육 비리의 심각성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준해 교육감도 “3만여곳에 이르는 학원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로 ‘단속’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나마 이날 △전국 초·중·고교 교사 8백4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교육현안’(박석무·민주) △대구시민 8백34명에게 묻은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도’(현경자·신민)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생 3백16명에게 묻은 학원비(이협·민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의원들의 성의가 한가닥 위안을 주었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폭행한 학원장 김정기씨가 맞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자 고발을 유보한 것은 교육청이 악점이 있어서가 아니냐”며 강동교육청과 시교육청

간해부터 지금까지 사설학원에 대

해 1만5천여건의 행정조처가 있었는데도 교육청 단속에서 금품수수 관련 비리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학원들과 교육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웅 의원

질의에 나선 박석무 의원은 “지

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설학원에 대해 1만5천여건의 행정조처가 있었는데도 교육청 단속에서 금품수수 관련 비리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학원들과 교육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웅 의원

도 시교육청 관내 9개 교육청이 모두 부당하게 학원인가를 해줘 공무원 68명이 적발됐는데도 3명만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협 의원은 대학 본고사 부활로 인한 불법과외의 급증을 학원 부조리의 한 원인으로 진단했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 초중고생 1인당 과외학원비는 27만5천원으로, 가계지출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석무 의원은 “학원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현경자 의원은 “부실건물은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 부실교육은 다시 고칠 수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동길 의원(신민)은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이 근본원인”이라며 “대학 문호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의원(민자)은 “단속만으로는 달걀로 바위치기”라며 대안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날 오후 늦게는 배영학원 폭행현장에 있던 강동교육청 서기 이재형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 당시 학원장이 “교육청 고위간부에게 매달 3백~4백만원씩 줬다” “이 명단을 폭로하면 교육장 이하 말단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다. 김이택 기자



진담

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원인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강동교육청 관계자들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종찬 기자